

작성: 이윤식 연구위원 (lee.youn.seek@ydi.or.kr)

## 1. 개요

- 최근 통일연구원, 아산정책연구원,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,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가 감지
  - 지난 7월말, 통일연구원(KINU)은 전국 성인남녀 1003명 대상, ‘대면 면접조사’(PI: Personal Interview) 방식으로 실시한 「2021 통일의식조사」 결과를 발표
    - ※ 「KINU 통일의식조사」는 대면조사(face-to-face survey)를 통한 신뢰도 제고가 특징.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관, 남북통합과 안보관,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인식 등을 알 수 있음
  - 아산정책연구원도 지난 9월, 전국 성인남녀 1500명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「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」이란 제하의 연례조사 결과를 발표
    - ※ 아산정책연구원 조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동일한 항목의 질문을 주고 추적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한 바, 국민 인식의 추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
  - 북한인권정보센터(NKDB)도 최근, 전국 성인남녀 1,000명 대상으로 10.8~15까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조사하고, 관련 결과를 공개
-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 미래세대인 젊은층들의 대북인식, 북한 인권문제, 그리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관 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짐
  - 특히, 2030세대들은 북한(김정은)과 자신들의 삶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, 통일에 대한 무관심 비율도 높아지는 분위기
  - 반면,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많아짐과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 의견도 증대되고 있어,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
  -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, 과거 ‘남북관계의 특수성’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, 정부가 北 당국에 “인권상황의 심각성을 공식 제기해야 한다”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

## 2. 결과 분석

### ① 젊은층에서 북한에 대한 무관심 비율 급상승 (KINU 조사 + 외교안보 조사)

- “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?”란 질문에 61.0%, 즉 국민 10명 중 6명이 ‘관심이 없다’고 답해,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
- 특히, 1991년 이후 출생한 이른바 ‘밀레니얼 세대’의 경우는 74.1%가 ‘관심이 없다’고 답했는데, 이는 2015년 KINU조사(66.7%) 보다 훨씬 증대된 수치
  - ※ 한편, IMF 위기를 겪은 4050세대는 63.8%가, 그리고 6.25 전쟁을 겪은 고령층들은 52.9%가 ‘관심이 없다’고 답해, 세대 간 다소 차이를 보임

### ② 통일관 및 대북 인식에 대한 증대한 변화 발생 (KINU 조사)

- “통일의 필요성”에 대해선 58.7%,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‘통일이 필요하다’고 답했는데, 이는 지난해 52.7%보다 6.0% 상승한 결과
  - 그러나 상기 결과는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활발하던 2018년(79.7%)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
- 아울러 대북 인식과 관련해서도 ‘지원(37.6%) 및 협력(40.8%)’ 대상이란 생각보다 ‘경계(69.8%) 및 적대(56.2%)’ 대상이란 생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,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 및 대북 인식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 중

### ③ 북한 인권문제 관련 정부의 공식 문제제기 필요성 증대 (NKDB 조사)

- 정부가 나서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“北 당국에 공식 제기해야 한다”고 응답한 비율이 60.2%로, “제기해선 안 된다”는 비율(39.8%)보다 높게 나타남
  - 주목할 만한 점은 상당수(70.2%)가 北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지만,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는 생각
- 또한, “북한인권 개선 가능성”을 묻는 질문에는 62.9%가 ‘개선 가능성이 없다’고 답해, ‘개선 가능성이 있다’는 비율(37.1%)보다 매우 높게 나옴
  - 이는 연이은 남북-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의 65.1%가 ‘개선 가능성이 있다’고 답한 것과 상당한 차이

### ④ ‘한반도 완전한 비핵화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(외교안보 조사)

- 2018년 이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면서 “北,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”이란 응답이

무려 93.3%나 나와, 10명 중 9명이 文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인 ‘한반도 비핵화’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

- 또한, 한반도가 전시 상황에 돌입했을 때 “한국軍 단독으로 북한을 이길 수 없다”란 응답이 67%, 그리고 한국軍 단독으로 “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”란 응답도 72.3%에 달해, 자체적 대북 억지역량 역시 낙제점을 받음
- 한편, ‘핵무장 필요성’과 관련한 질문엔 응답자의 69.3%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, 이는 2010년의 55.6%에 비해 13.7% 높아진 수치

※ 핵개발 찬성 비율은 남성(76.6%), 50대 및 60대 이상(76.8%), 보수층(79.4%) 등에서 높게 나옴

### ⑤ 한미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의 유지 필요성 공고 (KINU 조사 + 외교안보 조사)

- 먼저 한미동맹의 유지 필요성과 관련해 국민의 대다수(93.8%)가 ‘필요하다’고 답했고, 또한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‘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(90.3%)’고 답함
- 다만, “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”를 묻는 질문엔 47.7%만이 ‘필요 없다’고 답해, 통일 이후에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걸 알수 있음

### ⑥ 대주변국 호감도 관련 유의미한 변화 (KINU 조사)

- 2021년 KINU 조사에선 우리 주변 4국(미국, 중국, 일본, 북한)에 대한 호감도가 일제히 하락. 무엇보다,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‘反日 정서’가 정점을 찍던 2019년보다 더 낮게 나타남
- 현대, 더 주목할만한 특징은 ‘反中 정서’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.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서의 반중 정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
- ※ 5점 척도 기준으로 볼 때, △미국 1.37점, △중국 -1.65점, △일본 -2.87점, △북한 -1.97점 順 (즉,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, 일본, 북한 모두 다 비호감이란 의미)

## 3. 시사점

- 종합해 보면, 통일과 북한 이슈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바,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
- 통일미래 한국의 주역인 MZ세대들이 볼 때,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‘경계와 적대의 대상’에 더 가깝고, 한민족이란 당위성도 약해지고 있음이 확인

- 특히, 文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지나치게 김정은 정권의 입맛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 측면도 크고, 이런 상황이라면 기계적 통일보다는 각자도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란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

- ※ △북한軍이 우리측 GP에 조준 사격을 해도 “절제됐다”며 감싸는 발언을 하고, △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여당 대표가 “대포로 안 쏘게 어디냐”란 망발을 하고, △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태웠음에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한 적이 없었음

- ※ 또한,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순항·탄도·초음속 미사일 등을 차례로 쏘대는데도, 오로지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목을 매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극에 달함

- 반면, 한미동맹 공고화 및 주한미군의 유지 필요성 등과 관련된 안보적 이슈에 대해선 통일 이전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음
  - 한편, ‘독자 핵무장’ 관련 찬성 의견이 높다는 것은 북한의 자발적 핵폐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“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”는 안보적 현실을 자각한 결과

○ 이렇게 볼 때, 新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젊은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임

- 즉, △굴욕적 대북정책이 아닌 당당한 대북정책으로, △북한 우선이 아닌 국민 우선의 대북정책으로, △한민족이란 당위의 입각한 통일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통일정책으로, △김정은 정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대북 지원으로, △국제사회에 외면받는 통일외교가 아닌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통일외교정책으로 재탄생 되어야 할 것임
- 이에 우리는 新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컨셉으로 “젊고, 새롭고, 초월적이며, 당당하고,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진화 패러다임”을 제시하고자 함